

살충제 없인 닭 못 키우는 '배터리 케이지'

<충충이 쌓여 있는 철제 닭장>



살충제 계란 충격

공장식
생산방식
바뀌라

심 예견된 재앙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 등 공장식 축산 환경이 지목되면서 사실상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대부분이 A4용지 보다 좁은 공간에 닭을 가둬놓고 계란을 생산하는 밀집 사육 농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살충제 계란'과 조류독감 등 잇따라 발생하는 축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식품 안전을 위해서 '공장형 밀집 사육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산란계 농가의 94% 정도가 공장식 밀집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공장식 밀집 사육 농가는 대부분 닭 한 마리 당 가로 20cm, 세로 25cm 정도로 A4용지(21cm×29.7cm) 한장 보다도 적은

A4용지 한장 크기 보다 작은 닭장서 밀집 사육 파동 불러 AI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원인...동물복지 사육 시스템 시급

0.05㎡의 공간에서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다다 다닥 붙은 철제 닭장이 충충이 쌓여 있는 모습이 마치 배터리를 쌓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라고도 불린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져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닭은 습성상 몸에 붙은 진드기 등 해충을 흠을 몸을 문질러 털어낼 수 있지만, 밀집 사육되는 닭은 좁은 공간에서 그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살충제가 사용된 것이다.

특히 살충제 살포가 반복되면 해충의 면역이 높아져 살충제 독성에 강해지는 등 약순환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피프로닐처럼 사용금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마저 해충을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살충제 계란' 파동 뿐만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을 비롯한 구제역 등 가금류 및 가축 전염병 발병 원인도 공장식 축산환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동물복지나 식품안전 보다는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축산 구조의 문제점으로

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6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AI와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이 재발한 주요 원인으로 밀집 사육을 꼽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산란계 1마리

당 최소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유럽 수준인 0.07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했고, 아직 관련법 개정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또 다시 터져나왔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기존의 밀집 사육방식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동물복지 사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살충제 계란' 141만개 수거 폐기

식품안전처 "성인 하루 2.6개 평생 먹어도 문제 없어"

식품당국은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하면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49개 농장의 계란 451만개를 압류하고 농가로 반품된 243만개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전남지역 7개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량과 유통물량 141만개를 전량 회수해 107만개를 폐기하고 잔여물량 34만개를 22일까지 폐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직·판매업체에서 418만3469개(92.7%),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060개(0.5%),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5271개(0.3%)다.

다만 부적합 계란이 학교 급식소로 납품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당국은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정부 교통시설 예산 영남·수도권에 90% 퍼졌다

지난해 3746억원 보조 부산 947억, 광주 27억원 호남 2.1%...균형발전 역행

박근혜 정부 4년간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과 관리·운용을 위한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주승용(여수)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2016년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지원 지방도,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에 총 3746억원을 보조했다. 이 가운데 전체 예산 중 절반이 훨씬 넘는 63%인 2359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고, 영남권에도 1082억원(28.9%)이 집행됐다. 반면 충청권에는 201억원(5.4%), 호남권에는 79억원(2.1%)만 집행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시·도별로는 인천이 1696억원(45.3%)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았고, 부산이 947억원(25.3%)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75억원(15.3%)을 차지해 3개 특·광역시 중 예산의 85.9%가 편중됐다.

반면, 광주의 경우 27억원(0.7%), 전남은 25억원(0.7%), 전북 27억원(0.7%)만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자체 보조예산의 수도권 및 영남권 집중 현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전체 예산의 90%가 달할 정도로 집중됐다.

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자치단체 보조 사업 전체 예산의 90%를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위험도로·혼잡도로의 개선 사업에 지출되는 만큼 낙후지역을 위주로 고르게 분배하도록 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필기자 cki@kwangju.co.kr



기습 소나기에 분주한 발걸음 21일 오후 광주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세찬 바람과 함께 쏟아지는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최현필기자 choi@kwangju.co.kr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진보 법관... 文대통령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의 성격이 강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 지시와 관련해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법원 개혁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대적 사법부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했다"며 인신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가 오는 9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60·27기)과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13년이나 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함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적정임금(연대임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해소합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원하청관계개선을 통한 산업질서를 실현합니다

노사책임경명으로 투명경명과 노사상생협력력을 실현합니다

